

국내소식

살아나는 셋강, 좋아지는 농어촌 생활환경

그간 하수도 정비사업이 도시 또는 시설의 효율을 우선시하여 대규모 설치사업위주로 진행되오면서 농어촌 지역은 하수도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도시와 농촌간 '07년까지의 투자규모를 보면 총액의 70%가 시지역 이상, 30%가 군지역 이하에 투자되어 재정지원의 격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은 '07년 45.7%로 전국 평균인 87.1%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보급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지역 하수도 서비스 혜택의 양극화 심화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이자 경제활동의 기반인 셋강의 수질 악화 등이 야기됨에 따라, 정부는 '15년까지 농어촌지역 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자 총사업비 4조 7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7만여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의 최적화를 위해 관리기준을 수계 및 유역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적 관리로 전환하고, “농어촌지역 하수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수도 관리의 전문화 및 과학화를 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연계하여, 농어촌지역 “셋강”을 다시 살리는 계기를 만들고, 도·농간의 하수도 서비스의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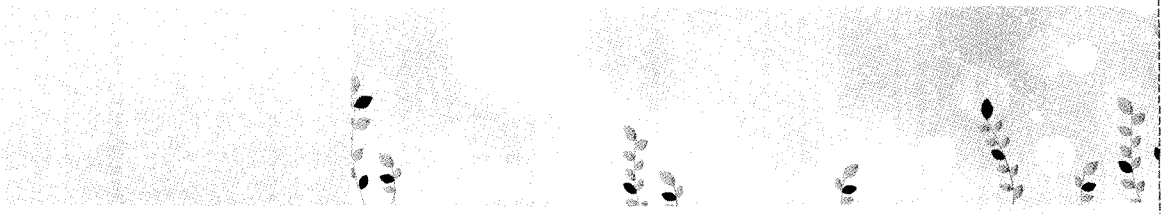
UNEP '한국 녹색성장 보고서' 발간

UNEP은 지난 8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평가한 보고서(Policy Brief)를 발표하였다.

UNEP은 올해 3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녹색경제 인프라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권고하는 총론적 정책보고서인 『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GGND)를 발간하였는데, 이에 후속으로 각 국의 녹색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한 정책보고서의 발간을 추진하는데 있어 첫 번째 대상으로 한국의 녹색성장을 선정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UNEP은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계획('09. 1)과 중·장기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 7)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시된 국가 온실가스(GHG)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3가지 시나리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같은 내용이 녹색성장전략과 연계됨으로써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사업 성공 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현상과 가뭄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UNEP은 한국의 녹색인프라 분야 투자규모와 신속한 집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제도 등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한국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자원효율성, 담수관리, 녹색기술혁신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measurable)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2009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이 설정·운영된다.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의무자 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이 기간 내에



신고하게 되면 법률적 처분이 면제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진신고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법에서 정한대로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강우 시에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 배출원을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2006년 4월부터 도입되었다. 비점오염원은 인간 및 산업의 활동 등으로 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강우 시에 수질오염물질로 유출시키는 도시, 사업장, 도로, 농경지 등을 말한다.

이러한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오염부하량이 2003년에는 50%이상이 되어 택지, 산업단지 등의 개발 및 토지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가 요구되는 개발사업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일부 업종의 사업장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 공사 중 및 개발완료 이후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제철시설 등 16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신고대상 업체 스스로가 비점오염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신고 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분규정으로 인해 신고기한을놓친 사업자가 미신고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단계에서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가 검토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함으로써 향후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비점오염원 신고 대상자에 대한 교

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자진신고 업체가 비점오염원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진신고기한은 2009년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2010년 1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엄정하게 처분하게 된다.

- ▶ 비점오염원 미신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비점오염원 변경 미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지하철 객차내 실내공기질 개선

환경부가 일평균 65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객차내 공기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측정해 본 결과, 수도권 9개 모든 노선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준 이내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05년, '07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는 추계('08. 10), 동계('09. 1), 춘계('09. 4) 3계절에 걸쳐 출퇴근 혼잡시간대와 평상시간대로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1호선~8호선(일산선, 과천선 포함), 분당선 등 총 9개 노선에 대하여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측정을 실시하였다.

객차내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출퇴근 혼잡시간대에는 $33.6 \sim 170.4 \mu\text{g}/\text{m}^3$, 평상시간대에는 $31.9 \sim 151.1 \mu\text{g}/\text{m}^3$ 의 분포를 보였으며, '05년, '07년에 비하여 완연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에는 $1,054.8 \sim 2,928.5 \text{ppm}$, 평상시간대에는 $713.7 \sim 2,002.2 \text{ppm}$ 의 분포를 보였으며, '05년, '07년 측정값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개선효과는 지하역사·지하철 공기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08년 추진된 지하역사 공

기질 개선 대책에 따라 지하역사내의 공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하역사 공기질 평균 미세먼지 농도($\mu\text{g}/\text{m}^3$) : 83. 2('06) → 81. 5('07) → 78. 1('08)〉 대책에는 지하역사 및 터널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터널내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로 개량, 역사 환기설비 개선, 고압살수차량 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터널내 자갈도상의 콘크리트화('09. 7월까지 92.3km), 환기설비 청소 및 개량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고압살수차량도 '08년부터 확대 운용('07년 1,564.4km → '08년 2,815.5km)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부는 지하역사·지하철의 공기질 개선 사업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통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고, 아울러 대중교통수단 공기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 녹색생활 실천 확산 본격 추진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내실있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을 지난 8월 24일 개최된 제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먼저, '범국민 녹색생활운동 본격화'라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녹색생활의 지혜」를 전국에 확산하고,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는 1기후운동을 추진하고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녹색생활 체험행사를 지속 전개하기로 하였다.

* 녹색생활의 지혜 : 사회의 각 부문별·생활패턴별 녹색생활 실천사항으로 10개 분야(가정, 직장, 학교, 군부대 등) 80개의 세부실천사항으로 구성

** 녹색생활 체험행사 : 4월 기후변화주간, 반기별 온실가스진단주간, 피서철 녹색여행 만들기 등 또한, 가정의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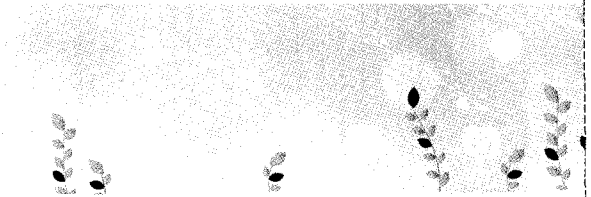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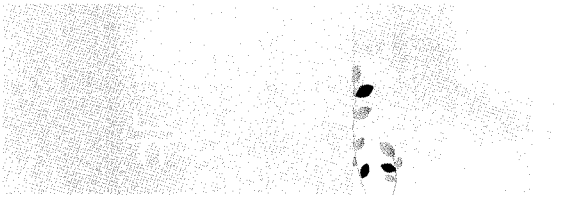
올 9월부터 가정내 '저탄소 녹색생활 양식'을 보급하고, 녹색 생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09년 5%에서 '12년 9%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에서의 녹색생활을 위하여 '쿨맵시운동'을 전개하고 '친환경운전 10계명' 등 다양한 녹색교통 캠페인을 실시하며, 자전거 활성화 기업·사업장에 대한 포상을 실시, '10년에 '보행자의 날' 지정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녹색생활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며, 이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생산·유통의 경우 '12년까지 500개 제품에 대해 탄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를 부착할 계획이며, 탄소정보의 공개를 통해 녹색생산·경영도 촉진한다. '11년에는 그린스토어 인증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사회부문별 우수사례를 수집·전파하고, 금년 11월 개최예정인 '그린스타트' 전국대회와 내년에 개최되는 '그린코리아 2010' 등 행사와 관련된 각종 시상과 포상을 통해 우수한 녹색생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생활의 모범적 실천자인 그린리더를 '15년까지 5만명 육성하고 그린스타트 홈페이지를 녹색생활 커뮤니케이션센터로 활용하는 한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녹색생활 실행기구로 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향후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의 세부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녹색성장위원회, 관계부처와 함께 녹색생활 실천 범국민운동을 신속하게 전개하여 녹색성장의 조기 구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 생태연구의 허브, 국립생태원 첫삽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 연구 및 환경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국립생태원 건립을 위해 지난 7월 27일 충남 서천에서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서천군의 장항 갯벌의 보전을 위해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代案)사업으로 진행되는 국립생태원 건립은 크게 연구·교육시설과 전시·체험시설로 구성된다.

특히, 생태체험관(Ecorium)은 아시아 최대의 생태 온실로 열대관, 아열대관, 지중해관, 온대관 및 극지관으로 조성되며, 각각에는 해당 생태계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재현하는 생태계 체험·전시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이 조성 과정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건립할 것을 계획 중에 있다. 사업부지의 원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험시설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패시브 하우스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건물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을 60% 절감하게 하고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의 완공으로 아시아의 미래생태 연구·전시·교육의 허브 기관이 탄생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사용하면 유해물질 크게 감소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고윤화)은 국내 보급중이거나 향후 보급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6가지 바이오디젤에 대한 대기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대두유, 폐식용유, 유채유, 팜유, 자트로파유, HBD(수소첨가된 바이오디젤) 등을 대상으로 경유에 각각 1%, 3%, 5%, 20%(부피)씩 혼합사용하였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중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는 바이오디젤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최대 약 55%까지 감소되었으며, 이는 바이오디젤 자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거의 없어 경유와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배출가스중 BTEX의 생성요인이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오디젤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미세먼지, 총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였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도 2%이내로 약간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으나, 질소산화물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폐식용유와 HBD유는 질소산화물 증가율이 3% 이내로 다른 바이오디젤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바이오디젤 사용량이 증가하면 연료중 운환성이 좋아지고, 산소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연소가 잘되기 때문이며, 연소온도 상승으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경유에 함유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함량인 1.5%(부피)와 가장 유사한 1%(부피)를 기준으로 3%, 5%, 20% 사용시 배출량을 비교하면, 미세먼지 15.5%, 일산화탄소 13.8%, 총탄화수소 16.6%까지 최대로 저감되었으며, 질소산화물은 최대 1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바이오디젤 보급확대시 유종 다변화 및 대기오염 영향 분석 시 기술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우유, 유(乳)업계 최초 녹색경영 선포



우리협회 회원사인 서울우유가 지난 7월 1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녹색경영 선포식을 갖고 환경비전을 발표하였다. 우유생산공장 최초로 거창공장에 대해 환경부의 '환경친화사업장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00년도에 이

미 전 공장의 연료를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ANL)로 전환하고 1급수 수준의 생산배출수를 활용, 거창공장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환경부하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업계 최초로 백색시유와 치즈제품에 대해, 한국표준협회가 환경지향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LOHAS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조홍원 조합장은 선포식에서 "2014년까지 생산부문의 탄소발생량을 25% 저감하고, 전 공장에 대해 환경친화 사업장 인증을 획득하며, 이를 위해 조합장 직속의 녹색경영 추진부서를 설치하여 경영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경기북부에 지어질 신공장에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설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기덕 사무관과 우리협회 장규신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제3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3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약화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

을 국제수준으로 경감해야 한다"면서 "소득·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금년 연말 일몰기한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율 인하는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속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따른 혜택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준까지 더 올려주고, 최대 주주 상속시 10~30%까지 할증과세하는 제도는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손경식 상의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 법인의 허용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였다. "의사, 치과의사, 국가 및 지자체로 한정돼 있는 의료기관 설립주체에 일반기업과 같은 영리법인도 추가해서 의료 서비스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리법인을 도입한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은 외국인 환자를 통해 더 많은 관광, 교역,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선진국형 노동시장에 대한 밑그림도 그렸다. 손경식 회장은 "비정규직은 당장의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중국에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하였다.

'변화하는 세계, 불확실한 미래, CEO의 새로운 리더십'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는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선배경영인의 충고도 이어졌다. 손 회장은 우선 "CEO는 예리한 통찰력과 폭넓은 국제감각 그리고 유능한 전략가로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단력과 실행력을 강조했다. 또 기업의 미래를 열고 창의로운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창의와 혁신' 그리고 원가절감,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 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3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는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과 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해 기업의 새로운 활

로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3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상의 제주 포럼'은 기업인들에게 연초 수립했던 기업 경영계획을 점검해 보고 하반기 경영전략을 구상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한·일상공회의소 회장 회의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3일 일본 동경에서 대한상의와 일본상의 회장단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일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간 협력이 상호보완 관계에서 점차 경쟁적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 협력분야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특히, 양국의 대표 전자업체인 삼성과 소니의 협력으로 차세대 DVD 표준 규격이 나온 것은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기술재휴를 통한 친환경기술 공동개발',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긴밀해지고 있는 한일관계가 실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양국 상의가 앞장서야 할 때"라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과제에 대해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손경식 회장 외에도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 12명과 오카무라 다다시(岡村正) 일본상의 회장, 노무라 아

키오(野村昭雄) 오사카 상의 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관광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서울상의 부회장)은 "한일 양국 상공회의소에 상시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관광 애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종희 사장은 "한국의 71개 지방상의와 일본의 51개 지방상의간 자매결연을 통해 양국간 채널망을 촘촘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 지난해 9월 대일 관광협력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일본상의도 같은 조사를 시행중에 있다. 이 사장은 양국간 협력방안으로 '실버관광, 녹색관광 등의 상품개발', '양 상의 관광산업위원회 정례회의', '관광산업연수단 상호과견'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인의 규모가 300만명에 이르는 데 실제 관광객은 100만명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는 상품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은 한일 인적교류로 양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인중 회장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가능인구가 크게 줄고 있어 IT분야를 비롯한 한국의 기술인력들이 이를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역시 기술인력의 과다공급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양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제캠프 등을 개최하여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차세대 리더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 인적교류를 위해서는 양상의 네트워크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장 회의에 이어 손경식 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오카무라 다다시 일본상의 회장, 사사키 아키오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회장 등 양국 중소기업 대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중소기업 CEO 포럼'도 개최였고, 이 자리에는 우리 기업의 일본진출 성공기도 소개됐다.